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
	배포일시	2017.10.19.(목) / 총2매(본문2)
담당부서	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 관제소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장 최승연, 과장 황순하, 주무관 정대철 • ☎ (032) 880-0211, 0215
보도일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‘하늘길 항공기 안전 이끌 항공감시시스템 좌초 위기’ 보도 관련

- ‘하늘길 항공기 안전 이끌 항공감시시스템 좌초 위기’라는 기사내용 중 다음사항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국내업체에 계약해제를 통보한 바가 없으며,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정상화 방안 권유 및 계약 이행 촉구, 관련업체 및 기관과의 협의 등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 - 국내 계약자가 요청한 외국장비공급사 에이젠트 간의 채권양도 양수 승인요청 사안은 **관련규정(조달청 훈령*)**에 위배되어 승인할 수 없었습니다.
 - * 채권양도승인규정 제6조(양도의 불승인): 선금사용내역 미 정산 처리, 계약 이행여부 불투명
 - 또한 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외국장비공급사가 한국지형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량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.
 - 이미 집행된 선금급 5억 5천만원은 계약해제 시 선금의 구상청구에 의거 환수가 가능합니다.
 - 아울러 항공내비게이션 사업은 이동통신망(LTE, 3G망 등)을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‘항공감시시스템 구축사업’과 관련이 없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경향신문), 10.18. >

◆ ‘하늘 길’ 항공기 안전 이끌 ‘항공감시시스템’ 좌초 위기

- 국내업체의 경영부실 등으로 수요기관은 2016년 10월 국내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하였고 협력사 4곳은 도산 위기
- 수주업체와 장비공급사 간의 채권양수 등을 통해 장비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
- 해외장비공급업체는 국내업체와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 직후 한국 지형에 맞는 시스템을 개량
- 이미 집행된 선금 4.5억원도 떼일 우려
- 항공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이 무산되면 항공내비게이션 사업도 지연
- 수요기관은 수주업체 탓만 하고 협력업체는 도외시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정대철 주무관(☎ 032-880-02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